

# 파면, 입장차이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다

교육의창

노영필  
교육평론가



싸운 정권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번 확인해 주었다.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온 것도 늘 국민이었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만들고 바꾼 주인도 역시 국민이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피로 쓴 역사다.

탄핵 선고는 명징했으나 아직도 혼란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 우리는 민주주의를 논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차이와 다름이 공존하는 사회다.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법으로 그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헌법적 판정과 형사법적 판정은 달라진다. 국회에 의해 소추된 탄핵 심판은 11 차례 심리로 종결되었지만 선고되지 않은 채 한 달이 넘도록 민주주의의 탕자가 되어 거리에 나왔고 사회적 분열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헌법재판소는 22분 짜리 인용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금과옥조를 꺼내 놓았다. 그 인용문 덕분에 탕자의 오명을 벗고 제 길을 찾는 셈이다. 무도하고 무지한 자에게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일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탄핵 선고 중계를 보던 시민들은 내란수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듣고 환호했다. 지난해 12월 3일,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들이닥친 친위내란은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내몰았다. 이후 불면의 밤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국민들 몫이었다.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을 상대로

했다.

탄핵 선고를 둘러싸고 보인 미디어의 횡포다. 미디어로 조작되고 왜곡된 사실을 존중해야 할 차이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역사 강사 전한길씨의 문제점을 주목하는 이유는 확정편향을 다루는 악의성을 서슴없이 조장하고 있는 점이다. 역사는 사실을 다루는 인문학적인 세계다. 역사가 조작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12·3 계엄을 둘러싼 소추인단의 5가지 쟁점은 사실의 문제이지 상상적 가설과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반국가 세력, 중국 관련성, 탄핵 남발의 경고성 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문제였고, 헌법재판관 8명은 이견 없이 파면을 선고한 것이다.

미디어는 탄핵을 둘러싸고 입장이 다른 세력이 맞서 있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그것부터 사실을 왜곡한 갈라치기 양비론이다. 미디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미디어가 사실을 왜곡하고 해석하여 알고리즘을 만들고 확정편향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 자료들만 접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향에 갇힐 수밖에 없다.

탄핵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인용문을 다시 읽고 자신의 그릇된 정보를 점검해야 한다. 원문을 읽지 않은 유튜브를 보고 키워진 상상적 소문은 나쁜 알고리즘을 만든다. 거기에 AI의 가공할 힘까지 작동될 때 더 큰 손실이 우리 사회를 조작하고 은폐해 혼돈의 길로 내몰 것이다.

社說

# 헌정사 비극 없는 단단한 대한민국 만들자

윤석열 파면... 위기극복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불명예 퇴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8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다. 현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법률을 위반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함으로써 국민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현재의 선고 요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쾌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해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인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5개가 모두 인용됐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는 데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다. 12·3 계엄이 경고성·호소용이거나 부정선거 탓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다거나 주요 정치인의 위치 추적을 시도한 의혹은 사실로 인정됐다. 내란죄 철회, 국회 일사부재의 위반을 따진 각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리 적용에 빈틈이 없는 데다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원천 차단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들은 환호했다. 계엄 당일 시민들은 국회로 몰려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장갑차를 몸으로 막아섰다. 계엄 선포 이후 122일 동안 시민들은 잠 못 이루며 거리로 뛰쳐나와 퇴진을 외쳤다. 지난 4일 11시 22분 현재의 파면 선고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의 승리를 알리는 순간이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대통령이 두 번째로 파면된 건 헌정사의 큰 비극이나 다름없다. 또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지켜낸 건 언제나 시민이었다.

내란 청산은 아직 끝이 아니다. 수사당국은 윤석열의 범죄 혐의 입증에 진력해야 한다. 파면 선고 전 지지부진했던 수사를 '빠르고 엄정하게' 하라는 의미다.

그 출발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구속과 각종 국정 농단의 의혹이 제기된 부인 김건희 수사·기소임은 불문가지다. 그것이 정의이자 그동안 고통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낸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내란 잔당 역

시 혐의 입증에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어설픈 관용은 사회를 분열과 충돌 속으로 몰아넣을 기회를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젠 국민 통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선고일 당일 경찰의 최고 수위인 '갑오 비상'을 발령했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냈다. 대국민 사과나 승복 의사를 굳이 밝히지 않던 과거 모습과 달라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현재의 결정에 온전한 승복만이 더 이상 혼란을 막는 길이다.

정치권의 대결구도도 종식돼야 한다. 현재는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위법 행위지만, 민주당의 횡포와 전횡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소로 판단한 것이다. 야권도 대화와 타협이 있는 정치 복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다. 미국 발 관세 폭탄의 직격탄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민생도 힘겹다. 지도자 공백 상태인 현재 경제와 민생, 더 나아가 외교는 중요한 국가 현안이다. 이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대선 역시 불가피하게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난 넉 달간 감시적 내란 상태에 있던 국민들을 또다시 갈등으로 내몰 수 있다는 예기다. 공정한 대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여야 정치권은 국민 통합 노력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대선주자들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국가 현안과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두 번의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도 갈등을 접고 빠른 안정화를 찾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광장의 분열과 적대는 이제 끝내고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여는 모습이 절실하다. 정치권은 갈등을 접고 안정을 통해 국정 정상화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오른쪽)가 6일(한국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5 MLB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에서 4회 2루타를 친 뒤 기뻐하고 있다. 이정후는 4타수 3안타 2득점으로 활약하며 3할대 타율에 진입했다. AP/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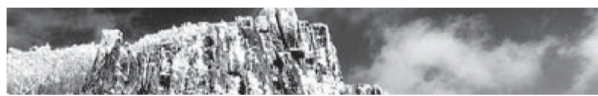
## 서석대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2023~2024년) 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1479건(광주 8781건·전남 1만269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광주의 경우 2023년 4796건에서 2024년 3982건으로 16.9% 줄었고 전남은 2023년 6574건에서 2024년 6124건으로 6.8%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데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연말 단체 행사나 모임 등이 줄어 최소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 술병에 쓰여질 음주 경고



전 사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스웨덴은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2%로 강화하고 한 번만 적발돼도 차량에 음주 측정 장치를 달아 시동이 안 걸리도록 했다.

한국은 2019년 운창호법 시행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음주운전 사고는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은 아직도 40%를 웃도는 실정이다.

지난 2월2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 또는 그림이 들어가게 돼 음주운전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고 문구만으로 행동을 바꾸긴 어렵고 법적 처벌 강화나 단속을 함께 시행해야 효과가 높아진다. 담배 경고 문구와 그림이 흡연을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가격 인상이나 금연구역 확대 등의 정책이 함께 시행됐을 때 더욱 효과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 역시 처벌 수위 상향, 대중교통 연장 운영, 음주 측정 장치 부착,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병행해 통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용납 불가능한 행위로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조선용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